

보건복지부		보도자료	
배포일		2019. 4. 11. (총 17대)	담당부서
단장		임근찬	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
기획총괄팀	팀장	임강섭	044-202-3840
	담당자	조성원	044-202-3841
제도표준화팀	팀장	김혜래	044-202-3842
	담당자	이관형	044-202-3140
시스템1팀	팀장	신지명	044-202-3145
	담당자	윤종현	044-202-3160
시스템2팀	팀장	서민수	044-202-3166
	담당자	정우진	044-202-3828
			044-202-3872

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!

- 보건복지부, 「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」 발표 -
-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을 위한 5대 전략 마련 -

<주요내용>

- ❖ 필요할 때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「(가칭)복지 멤버십」 도입
- ❖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복지사업을 확대(19→41종)하고, 병원·복지관에서 일부 복지사업 신청 대행
- ❖ “지역사회 통합돌봄”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, 보건소, 복지관·시설, 병원 등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사례관리 공통기반(플랫폼) 구축
- ❖ 시설별·사업별로 나뉘어진 사회서비스 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
- ❖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복지지원여부를 조사·판정하는 “반(半) 자동 조사·결정” 도입
- ❖ 현장을 찾아가서 바로 상담·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(모바일) 행복e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 도입
- ❖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개발 지원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복지 대상자(사람)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·통합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*(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)의 구축계획이 담긴 「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」을 발표하였다.

* 2010년 개통된 ‘행복e음’(사회복지통합관리망),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를 의미 (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(2019~2023)의 정보 기반에 해당함)

-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(기획재정부, '18.5월)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*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.

* 총 사업비 3,560억 원 : 구축비(3개년) 1,970억 원, 운영비(5개년) 1,590억 원

- 이날 「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」 발표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,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, 차세대 정보시스템 종합계획(마스터 플랜, ISMP)* 사업자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선포하는 행사**도 개최하였다.

* 마스터플랜(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) : 본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업무과제별 프로세스와 상세 개발요건 등 수립하는 작업('19.4~11월, 29억 원)

** 행사 개요

- (행사명) 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(보건복지부 소속)」 및 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실무 지원단(사회보장정보원 소속)」 현판식
- (시간) '19.4.11(목), 15:20 ~ 15:40
- (장소)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(나성동 SM타워 4층)
- (참석자)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,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, LGCNS 정운열 상무이사 등

□ 「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◇ 추진 배경

○ 2010년 개통된 지금의 정보시스템(행복e음 등)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왔다.

- 다만, 복지급여 증가*로 전산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비효율**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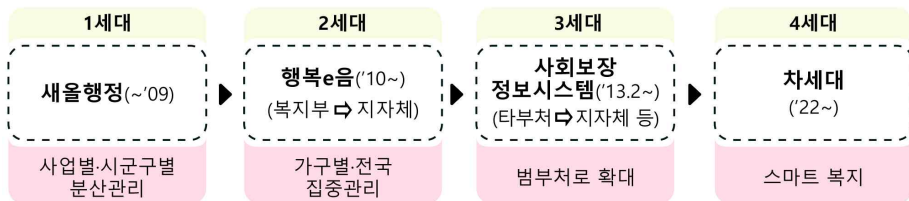
* <'10년 대비 '17년> '행복e음' 관리 복지대상자 : 4.1배 증가 (700만 명 → 2,867만 명)
복지 예산 : 3.8배 증가 (20조 원 → 76조 원)
복지 사업 수 : 3.5배 증가 (101종 → 350종)

** 연간 정보시스템 중단 일수 : 평일 6.5일, 공휴일은 13.5일

○ 또한 정보시스템이 소득보장(공적급여) 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하여, 보편적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·관이 협력하는 통합돌봄 체계(패러다임)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

○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발달하는 기술(인공지능 등)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.

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발전단계



* (1세대) 사업별·시군구별 분산 관리(새울) ⇨ (2세대) 가구별·중앙 집중 관리(행복e음) ⇨ (3세대) 범부처 복지사업 지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)

◇ 5대 전략별 핵심과제

1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

○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'(가칭) 복지멤버십' 제도를 도입한다.

* '(가칭) 복지멤버십' 용어는 향후 순 우리말 명칭 공모 예정

-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'(가칭) 복지멤버십'의 회원으로 등록*할 수 있게 된다.

* 복지로(인터넷 홈페이지,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)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,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현장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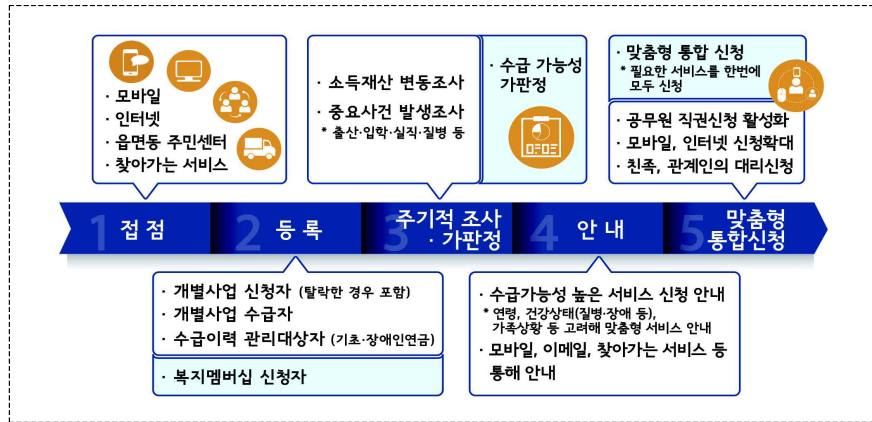
- 등록한 사람이 조사에 동의한 가구, 소득,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·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이 주기적으로* 가(假) 판정하게 되고,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(패키지 구성)은 맞춤형**으로 안내하여 신청 받을 계획이다.

* 중요한 계기(예: 임신·출산, 입학, 실직·퇴직, 중대 질병·장애 발생, (장기)입원 등), 경제 수준 변동, 신규 제도 도입, 기존 제도 확대 등

** 온라인·모바일(홈페이지, 문자 메시지, 사회관계망서비스), 이메일, 찾아가는 서비스 등

- 안내를 받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.

‘(가칭) 복지 멤버십’ 진행과정 개요



○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담·안내를 받고,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·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.

-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2배 이상(현재 19개 사업 ⇨ 41개 이상 사업) 늘리고,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* 온라인 신청률을 2.5배 수준**으로 올릴 예정이다.

* 예 : 간이신청서를 도입하여 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필수정보만 작성

** 온라인 신청 비율 : ('18년 현재) 16% → (향후) 40% 이상 목표

○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,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이 병원(사회사업팀)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(긴급복지, 돌봄서비스 등)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
* 국민 수요 분석 ⇨ 시범사업('20.6~) ⇨ 법제화 ⇨ 단계적 확대

○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 관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「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.0」을 도입할 계획이다.

- 현재는 단전·단수 정보,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.

* 14개 기관 27종의 공적정보를 연계하여 빅데이터 발굴시스템으로 분석

- 앞으로는 위기가구의 정의·대상을 다양화하여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, 관계단절, 정신적·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.

-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(국번 없이 129) 상담사, 민간 복지기관(복지관 등)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.

-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(고용위기 등 지역별 위기상황 등)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분석·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원룸, 고시원, 판자촌 등 주민등록 정보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위기징표가 밀집된 곳의 위치정보를 제공해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발굴·지원

2

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

-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·관 기관이 협력하여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, 사례관리* 공통기반(플랫폼)을 제공하여 복지 대상자 중심 정보 연계를 지원한다.

* 지역사회 내 공공·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지원체계를 토대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·관리(모니터링)해 나가는 사업

- 사례관리 공통 플랫폼 내에서도 대상자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민간 복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지역사회의 주거·보건의료·돌봄·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·정비하는 '사회보장자원 통합플랫폼' 구축을 통해 복지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.

- 다양한 민·관 기관이 협력하여 사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해서는, 「국민 자문단」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.

- 시설별·사업별로 각각 개발되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「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」을 구축한다.

- 이는 복지 체계가 자산조사(means-tested) 기반의 선별적 지원에서 욕구기반(needs based)의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통합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.

- 이에 따라 시설별·사업별로 분절된 정보가 개인을 중심으로 개편·통합되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.

- 우선 시설정보시스템*과 전자바우처시스템**을 통합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시설·서비스의 정보 품질(정보 정확성·수준 통일 등)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 등이 여러 개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△사회복지시설·법인, 장기요양기관의 내부업무(회계, 인사, 급여 등), 시군구 보고, △지자체의 시설관리(보조금 등), △국민 대상 기본정보 제공

**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·산업통상자원부의 14개 전자바우처사업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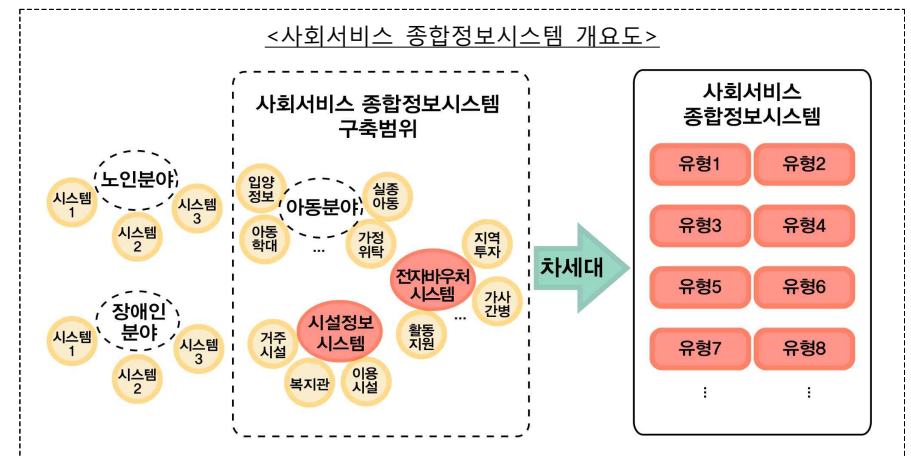
- '사회서비스원'의 업무처리와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여 공공 분야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갖는 기능과 역할을 지원한다.

* △중앙지원단 업무 △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업무 △개별 사업관리(시설 수탁 운영, 종합재가센터 운영) 등 지원

- 아동권리보장원* 설립(19.7)을 뒷받침하고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사각지대 없는 보호를 위해 기존 아동 분야 7개 시스템**을 통합한다.

* 아동복지법 개정(18.12)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,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기관

** ▲아동학대, ▲실종아동, ▲입양아동, ▲가정위탁, ▲자립지원, ▲지역아동센터, ▲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아동양육시설, 다함께돌봄센터 등



3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 구현
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대상자 소득·재산 조사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* 대국민 상담 역량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* 서류 발급·제출 등을 통해 소득·재산에 대한 확인(질문, 자료제출 요구 등)이 필요하나 실제 활용도는 낮은 '수기 조사항목' 대폭 정비 등
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'반(半) 자동 조사·결정' 제도와 시스템*을 도입한다.

* 아동수당 첫 대상자 선정 시(18.9월) 적용: 조사대상자의 59%(115만 명)를 자동 처리하여 빠르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한 사례
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복지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·접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'모바일 행복e음'을 구축하여 지원한다.

* 현재는 업무공간 내 개인 컴퓨터(PC)를 통해서만 '행복e음' 접속·활용 가능

- 모든 사회보장사업(중앙행정기관)의 지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(AI) 비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.

- 지방자치단체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사업(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)을 자체적으로 기획·운영할 수 있도록 '오픈 마켓형 시스템*'을 구현·지원한다.

* 미리 표준화되어 있는 메뉴(절차, 기준 등)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설계

4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분석·결정 지원시스템

-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·결정 및 연구를 지원한다.

- 분산된(사회보장정보시스템, 바우처, 보육 등) 정보통계시스템(DW : Data Warehouse)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한다.

- 특히, 연구기관·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, 학술·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.

* 데이터 분석실 확대(현 사회보장정보원 내 1석), 온라인 분석지원(계정) 시스템 구축, 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설치·운영 등 공개기반 강화

-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제도 도입·변경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.

- 또한 “내가 사는 동네”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·공급을 분석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.

5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시스템
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안정성·효율성·편의성을 개선하여 연중 상시 업무가 가능하고,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,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.

-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연도 전환(예: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) 등의 시스템 정비기간에도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업무절차를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증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.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평가단을 설치·운영하여 화면 구성과 업무처리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한 화면을 설계할 계획이다.

◇ 「국민자문단」 구성·운영

-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전산시스템의 개발이나 기능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·제도의 개선, 정보전달체계의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, 민간복지기관의 전문인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, 민간 복지 전문인력, 학계·연구기관 전문가, 국민(대학생, 자녀를 둔 부모 등)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「국민 자문단」을 구성하였다.

* 단장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

-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「국민 자문단」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.
- 4월 30일(화)까지 「국민 자문단」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복지부 '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'으로 문의하면 된다.

* 연락처 : 044-202-3844, sks1225@korea.kr

◇ 기대 효과

- 이러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온라인 신청, 직권 신청이 확대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'신청주의'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지역사회에서 민·관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·단체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 돌봄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'사회서비스원'과 '아동권리보장원' 설립 및 '지역사회 통합돌봄'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정보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.
- 일선 복지공무원의 소득보장(공적급여) 자산조사 및 대상자 관리 업무 부담을 줄여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이와 같이 추진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, 한국사회 복지행정연구회 김정길 회장은 “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대면 서비스와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-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장진 팀장은 “개별 시스템·사업별로 분산된 정보의 연계·공유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자문 의견을 전했다.
- 한편, 국립중앙의료원 사회사업실의 이승민 주임은 “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확대되어 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“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(ICT)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- 또한 “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다짐했다.
-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“국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,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모습
2.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
3.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사무실 현판식 개요
- <별첨>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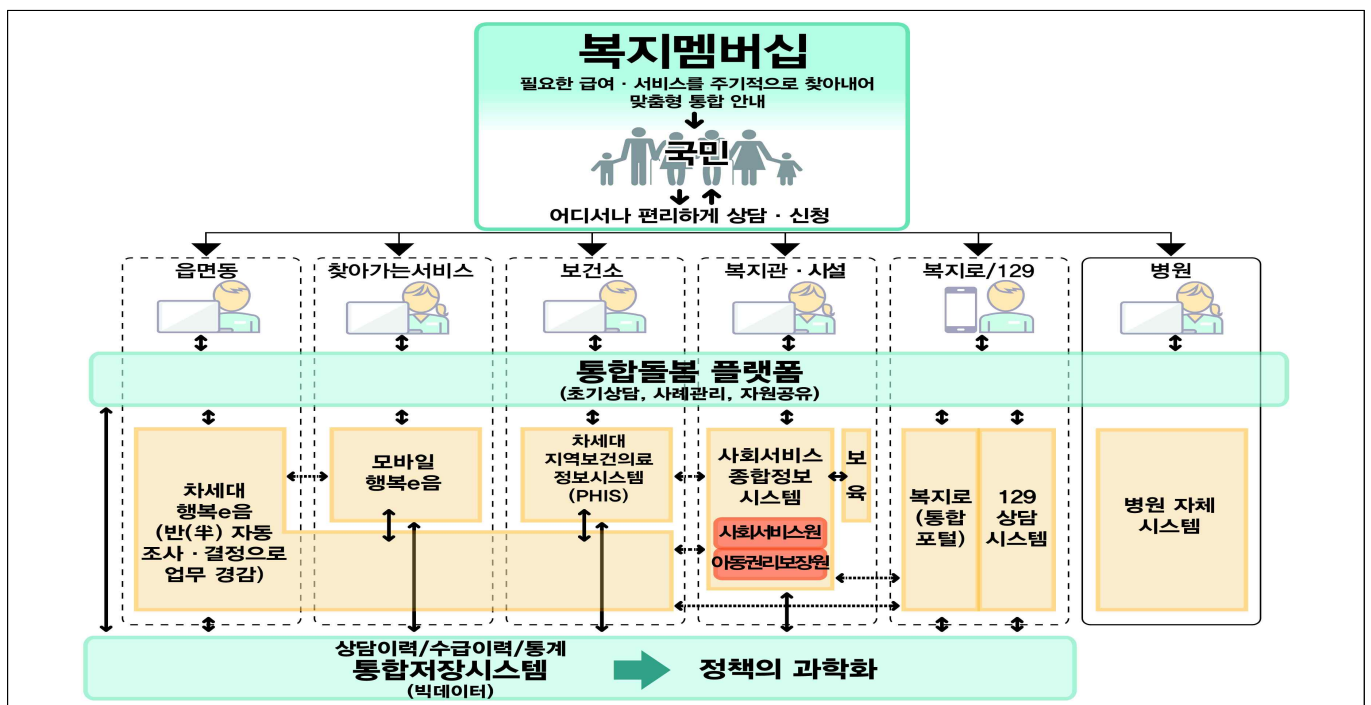
붙임 1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모습

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민이 겪게 되는 일들

(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다루는 범위)



붙임 2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



붙임 3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사무실 현판식 개요

□ 배경

-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비전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
-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내 전담조직과 사무실 구성, 마스터플랜(ISMP) 사업자 선정 등에 맞추어 '사회보장 정보전달 체계' 비전과 기본방향 발표('19.4.11)
-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한 현판식 개최

□ 행사 개요

- (일시) '19. 4. 11(목), 15:20 ~ 15:40
- (장소)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추진단 사무실
* 세종시 정부2청사로 10(나성동, SM타워 4층, 행안부 본청 정문 앞)
- 주요 참석자
 - (복지부) 권덕철 차관,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, 임근찬 차세대 정보시스템 추진단장 등
 - (사회보장정보원) 임희택 원장, 이운태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, 김성훈 실무지원단장 등
 - (LG CNS*) 정운열 상무이사(공공사업담당) 등

* 마스터플랜(ISMP) 사업자